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박사명*

I. 서론

북핵문제로 인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2003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밀실에서 광장으로 진출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에서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이른바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사이 이념갈등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른바 ‘2030세대’와 ‘5060세대’ 사이 세대갈등의 이미지이다. 이념과 세대가 중첩하는 이중적 갈등의 상승작용에 따라 한국사회의 정치적 ‘문화충돌’이 첨예하게 심화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획기적인 정치문화의 변동은 ‘민족민주운동의 구심’을 자임하고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표방하면서 반미운동을 주도하는 한 사회단체의 자체적 평가에서도 각별하게 강조 된다.

최근 반미의식의 고조는 지난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특정 세대, 특정 계급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민정서화 되고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해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 자체에 대한 보편적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특히 최근의 반미투쟁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전국연합 2003).

한국사회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그와 같은 ‘질적’ 전환은 극단적 ‘친미’에서 극단적 ‘반미’까지 광범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경험하는 필리핀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2차대전 이후 급속하게 고착되는 양극적 냉전 체제는 미국패권에 저항하는 반미운동과 소련패권에 저항하는 반공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초래한다. 한반도의 경우 분단체제의 고착에 따라 국가가 동원하는 반미운동(북한) 및 반공운동(남한)을 제외한 사회의 자율적 반미운동(남한) 및 반공운동(북한)은 전면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필리핀과 유사하게 강력한 반미운동의 부상에 직면한다. 사실 한반도와 필리핀은 일본과 미국이 상호공존에 타협하는 ‘카쓰라-태프트(Katsura-Taft) 밀약(1905년)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 역사적 운명이 연계된다. 그러한 상호관계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충돌을 초래하는 2차대전 이후 일본에 대한 ‘점령군’이자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해방군’으로서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동남아와 동북아 전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더욱 긴밀하게 강화된다.

따라서 필리핀과 한국에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수용과 거부 의 갈등은 필연적 현상으로서 그 표출의 계기와 확산의 범위가 문제일 뿐이었다. 필리핀의 경우 사회개혁의 부진과 경제발전의 정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비판하는 반미운동은 1950년대 농민전쟁과 1960년대 학생운동에 따라 부상하고, 1970년대 권위주의에 따라 잠복하며, 1980년대 민주혁명에 따라 부활한다. 한국의 경우 1950년대 한국전쟁, 1960년대 군사정변, 1970년대 유신체제 등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권위주의는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 수용을 초래한다. 그러나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에 따라 분단체제의 고착과 군부독재의 강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비판하는 반미운동이 확산된다. 그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에 있어서 미군주주의 성격은 ‘해방’에서 ‘점령’으로 반전되고, 대미관계의 본질은 ‘동맹’에서 ‘종속’으로 격하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본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필리핀의 미군기지 철수는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한 차별성이 부각되는 새삼스런 계기이다.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담론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심리적 성향에 관한 시각은 다양하다. 대체로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정서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부분적이며 가변적인 거부는 ‘반미감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한 의식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거부는 ‘반미주의’로 인식된다. 그러한 반미운동의 실천적 동향에 있어서도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상대적 비중에 관한 시각은 다양하다. ‘반미주의’의 압도적 비중을 강조하는 시각은 급진적 현상타파를 우려하고, ‘반미감정’의 압도적 비중을 강조하는 시각은 궁극적 현상유지를 기대한다. 그러나 반미운동의 현실적 효과에 있어서 ‘반미감정’과 ‘반미주의’의 두드러진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대미동맹과 반미운동의 상충적 전개과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이 드러내는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반미운동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의 전개과정 및 표출양태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할 것이다.

II. 역사적 전개

1. 필리핀의 반미운동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국은 ‘해방군’으로서 식민지 필리핀의 권력공백에 복귀한다. 그러나 식민시대를 통하여 성장한 급진적 민족주의의 반미운동은 1946년 공식적 독립 이후 한국전쟁과 유사한 시기에 후끄(Huks: 항일인민군) 농민전쟁을 통하여 표출되며, 냉전체제의 고착과 미국의 군사원조에 따라 잠복한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개혁의 부진과 경제발전의 정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대외적으로 ‘반(半)식민주의적’ 대미종속구조와 대내적으로 ‘반(半)봉건주의적’ 과두지배체제의 유기적 공생관계로 파악하고, 식민체제에 대응하는 혁명적 민족주의와 과두체제에 대응하는 민중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부상하여 ‘가두의회’로 진출한다(Sison 1967). 그와 같은 정치변동에 있어서 중국사회의 급진화, 베트남전쟁의 국제화, 인도네시아정치외교의 좌경화 등 급진적 혁명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동아시아 정치지형의 영향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국제적 조건이다.

1970년대 한국의 ‘유신’ 독재체제에 상응하는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의 ‘신사회(New Society)’ 독재체제는 군부독재와 문민독재라는 표면적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대외적으로 중소분쟁, 미중화해, 베트남전쟁, 미군철수 등 냉전체제의 균열과 대내적으로 과두체제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대처하여 민족자주, 사회개혁, 경제발전 등을 위한 ‘위로부터의 혁명’을 추구하는 ‘신사회’체제는 사회의 급진적 반미운동에 대한 전면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파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응하여 민족적 주체성을 표방한다. 국가의 ‘공식적 민족주의’가 사회의 급진적 민족주의

를 선택적으로 전용하는 것이다(Abinales 1992). 그것이 비록 권위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조작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1970년대에 동원되는 국가주도적 민족주의의 보수적 ‘주체담론’은 1980년대에 부활하는 사회주도적 민족주의의 급진적 ‘반미담론’에 일정한 기반을 제공한다.

마르크스 독재체제의 경제적 과탄과 정치적 파국에 대응하여 강화되는 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의 혁명투쟁은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 독재체제와 지주계급 과두체제에 대한 미국의 후견을 비판하는 반미운동의 광범한 부활을 촉진한다. 1983년 아끼노(Benigno Aquino)의 암살을 계기로 혁명적 위기가 고조되고, 1986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급진적 반미운동은 절정에 도달한다(Bresnan 1986). 민주혁명 이후 반미운동의 표적은 제국주의의 보루로 인식되는 미군기지에 집중된다(Abinales 1992). 냉전종식에 따라 약화되는 국가안보의 명분 대신 경제효과를 명분으로 기지철수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정부의 친미주의에도 불구하고, 1991년 사회의 급진적 반미담론과 국가의 보수적 ‘주체담론’이 미군기지 철수로 수렴된다. 그러나 다수의 사회여론은 여전히 기지철수에 반대하고(Ferrer 1992), 1951년 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1997년 ‘중국위협’의 부상 등 새로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미군의 ‘상시주둔’ 대신 ‘일시방문’을 허용하는 ‘방문군대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이 체결된다.

1950년대 농민전쟁의 종식에 따라 사회의 급진적 반미운동은 잠적하는 반면 점진적 반미운동은 의회의 렉토(Claro Recto)와 타나다(Lorenzo Tanada) 등을 통하여 그 명맥이 유지된다(Constantino 1965; Constantino 1983).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진적 반미운동은 ‘미완의 민족혁명’ 완수를 지향하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통하여 부활

하며, 혁명적 무장투쟁을 추구하는 CPP-NPA의 출현으로까지 연결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사회적 모순, 경제적 정체, 정치적 억압의 근본적 원인을 각종 ‘불평등조약’을 통한 제국주의와 과두체제의 현상유지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을 변호하는 보수적 식민사관을 대체하기 위한 급진적 민중사관의 반미담론을 강화한다(Agoncillo 1967; Sison 1967; Sison 1998; Constantino 1975; Guerrero 1979). 그러한 급진적 반미담론은 1970년대 보수적 ‘주체담론’에 의한 선택적 포섭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혁명적 정치지형을 통하여 치열하게 부활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군사기치 철수에서 1990년대 중반의 ‘방문군대’ 복귀까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 최근 테러위협에 대응하는 ‘미군방문’ 및 이라크파병과 관련하여 “미국 탯줄의 절단을 향한 과거 모든 진전의 지속적 원상회복”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된다(David 2003).

2. 한국의 반미운동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에 따라 한반도의 권력공백에 진입하는 미국과 소련은 ‘해방군’으로서 남과 북을 분할한다. 이른바 해방공간을 장악한 양대 패권의 통제 아래 급속하게 심화되는 좌우의 이념적 갈등은 남북의 정치적 분단으로 귀결된다. 양극적 냉전체제의 국제적 원심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족적 구심력은 급속하게 약화되며, 일시적 분단상태는 민족상잔의 열전을 거치면서 장기적 분단체제로 고착된다. 한반도의 그와 같은 구조적 균열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 위상이 남북을 막론하고 각각 그 지지세력의 시각에서는 ‘해방군’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반면, 그 반대세력의 시각에서는 ‘점령군’으로서 전면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북한체제의 생존조건인 반미주의와 남한체제의 생존조건인 반공주의는 분단국가의 이념적

기반이자 물질적 기초로서 ‘적대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 그에 따라 한반도 북부의 반공주의에 대한 통제와 남부의 반미주의에 대한 통제가 상승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분단체제의 정치역학이다.

북한의 전체주의에서 사회의 반공주의적 도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반면 남한의 권위주의에서는 사회의 반미주의적 도전에 대한 통제가 부분적으로 이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남한의 공고한 반공주의 정치지형에서 반미주의는 전반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었다. 다만 베트남전쟁, 중소분쟁, 미중화해, 미군철수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한 국력강화와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유신’ 독재체제의 정당화를 위하여 ‘민족적 주체성’이 제기된다. 그 결과 국가주도적 민족주의의 보수적 ‘주체담론’이 일방적으로 확산되는 반면, 사회주도적 민족주의의 진보적 ‘반미담론’은 전면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나 반드시 위로부터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밑으로부터 사회의 전쟁, 빈곤, 억압에 대한 절망과 평화, 발전, 자유에 대한 열망은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81년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미관계에 대한 전체국민의 시각은 아직 ‘만족’ 58.1% 및 ‘그저 그렇다’ 32.6%에 이르는 반면 ‘불만족’은 9.3%에 불과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불만족”이 30.8%에 이른다(김진웅 2002: 19).

한국사회 반미주의의 등장과 성장에 있어서 1980년대는 역사적 전환 단계로 평가된다.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한 이후 거의 40년 만에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반미운동이 세계적 냉전체제와 민족적 분단체제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강고한 역사적 지층으로부터 정치적 지표로 분출하게 되는 계기는 1980년 광주항쟁과 1987년 6월항쟁이다. 광주항쟁은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등장을

촉발하고, 6월항쟁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군부독재의 배후’로 전도되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위상과 역할이 남북통합의 ‘고리’에서 남북분단의 ‘썩기’로 반전된다. 1980년 광주, 1982년 부산, 1985년 서울로 이어지는 미국문화원에 대한 공격은 반미주의의 단계적 확산을 상징한다. 1987년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85.3%가 남북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54.9%가 주한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서 ‘신식민지 파쇼체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반면 반대는 17.0%에 불과하다(김진웅 1992: 27). 1988년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군주둔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정적 시각이 부각된다(표 1).

(표 1)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시각 (단위: %)

설문 내용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조속 철수	17.1	9.9	4.6	2.5	9.8
점진 철수	68.0	68.2	55.9	47.5	61.9
철수 불가	14.9	21.9	39.5	50.0	28.2

출처: 김진웅 1992: 45.

민주주의의 이행과 정착이 가속되는 1990년대 이후에는 반미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심화된다. 그에 따라 급진적 민족주의 시각에서는 “해방 이후 미군이 이 땅에 총칼을 들고 점령군으로 쳐들어와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염원하던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학살했던 현대사”가 복원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이라크파병 결정은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에 대한 동의”로 규정되며, “한미공조는 전쟁공조”이므로 ‘한미공조’를 폐기하고 ‘민족공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법민련 2003). 이제 반미운동은 한국사회의 정치역학에서 하나의 변수로 격상되고, 그 정치지형에서 하나의 구조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 점에 있

어서 한국의 반미운동은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가 추동하는 대외적 주체화의 한 측면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성장, 사회적 변동, 정치적 발전의 필연적 귀결로서 반미주의는 분단체제의 현상 타파를 위한 창조적 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하는 1945년 ‘해방공간’의 이념갈등이 남북분단, 민족상잔, 분단고착, 독재강화를 초래하는 역사과정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진보적 시각의 ‘재인식’ 작업은 1980년대 이후 광범하게 전개된다. 그러한 작업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신화적’ 미국담론을 해체하고 다시 ‘역사적’ 미국담론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타자’에 대한 시각의 전환은 ‘자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수반하는바, 장기적 대미의존이 초래한 민족적 자아상실의 폐허에서 민족적 주체의식이 부활하는 것이다(이영희 1999; Constantino 1974). 그 점에 있어서 1970년대 냉전체제의 균열에 따른 국가의 보수적 ‘주체담론’과 198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사회의 진보적 ‘주체담론’ 사이에는 일정한 역사적 연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1972년 7·4남북공동선언과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민족자주’의 일정한 ‘혈연’이 발견되는 것이다.

Ⅲ. 현실적 양태

1. 유사성과 차별성

필리핀과 한국에서 1970년대에 잠복하고, 1980년대에 부상하며, 1990년대에 확산되는 반미운동은 일정한 구조적 필연성과 상황적 우연성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대외적으로 양극적 냉전체제의 이완과 해체로 인하여 미국의 온정주의적 동맹정책이 약화되고 패권주의적

국가이익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패권에 의존하는 반공주의적 ‘안보국가’가 약화된다. 대내적으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약화에 따라 강화되는 민주주의적 사회세력은 반미운동의 등장과 성장을 주도하며, 그러한 정치과정에서 특정의 정권, 정책, 사건 등 지극히 유동적인 상황의 변화가 반미운동의 객관적 계기를 제공한다. 만성적 경제정체에 따라 심화되는 필리핀사회의 좌절의식은 가속적 경제발전에 따라 상승하는 한국사회의 자존의식과 유사하게 반미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요인은 한국과 필리핀의 유사성을 초래하는 반면 상황적 요인은 한국과 필리핀의 차별성을 대표한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 있어서도 필리핀은 2차대전 이전의 식민체제로 인하여 대미의존이 심화되고, 한국은 2차대전 이후의 분단체제로 인하여 대미의존이 심화되는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그와 같은 유사성과 차별성은 반미주의의 확산범위와 심화수준에 있어서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성을 초래한다. 최근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필리핀과 한국의 여론동향은 직접적 지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 지표로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전 이후 2003년 45개 국가에 대한 이라크전쟁 관련 국제여론조사에서 필리핀과 한국은 상당히 대조적인 경향을 드러내는바, 전쟁의 정당성, 미국의 호전성, 테러의 위협성, 유엔(UN)의 실효성, 미국의 이미지, 미국의 공익성 등에 관한 필리핀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한국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표 2). 2002년 36개 국가에 대한 국제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일반적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응답의 비율은 1위 아르헨티나의 65%, 36위 포르투갈의 14%에 비하여 5위 한국은 55%로서 지극히 비판적이다(Gallup 2002). 따라서 한국 반미운동의 사회적 지지기반은 필리핀보다 훨씬 광범한 것이다.

〈표 2〉 이라크전쟁에 관한 국제 여론 (단위: %)

설문내용	응답	필리핀	한국
미국의 최근 군사행동이 정당하다	긍정	59	20
	부정	37	69
	무답	4	11
미국은 너무 군사행동을 선호한다	긍정	45	65
	부정	52	27
	무답	3	8
테러의 위협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긍정	56	29
	부정	42	60
	무답	2	11
유엔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된다	긍정	45	79
	부정	52	14
	무답	3	7
자신의 대미인식이 최근 호전된다	긍정	55	13
	부정	28	66
	무답	17	21
자국에 대한 미국영향은 유익하다	긍정	61	24
	부정	24	55
	무답	15	21

출처: Gallup International 2003.

2. 계속성과 가변성

필리핀과 한국의 다양한 여론동향은 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바, 그것이 정서적 ‘반미감정’이든 의식적 ‘반미주의’이든 일정한 조건에서 모두 반미운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반미감정’은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기인하는 다분히 상황적이고 유동적인 현상으로서 반미운동의 피동적 부분이며, ‘반미주의’는 거시적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인식에 기초하는 상당히 구조적이며 항구적인 현상으로서 반미운동의 주동적 부분이다.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Vladimir Lenin)과 카우츠키(Karl Kautsky)의 고전적 논쟁과 같이 ‘정책(policy)’으로서의 제국주의는 상황적이고 선택적이지만, ‘체제(system)’로서의 제국주의는 구조적이며 필

연적이다(Lenin 1965). 예컨대 세계체제의 일정한 구조적 조건 때문에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라고 인식한다면 의식적 반미주의의 경향이 큰 반면, 특정의 정권, 정책, 사건 등 일정한 과정적 계기 때문에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라고 감지한다면 정서적 반미감정의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이고 항상적인 거부는 ‘반미주의’로 분류되고, 미국에 대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비판은 ‘반미감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진웅 1992: 63-64; 커밍스 2003).

필리핀과 한국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그러한 표면적 양태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이 심리적 차원에서 행동적 차원으로 표출될 가능성, 즉 반미주의의 점진적이거나 급진적인 지향과 잠재적이거나 실천적인 수준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계속성과 가변성에 대한 논리적 추론은 가능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반미운동의 심리적 기초에 대한 심층적 해부가 긴요한바, 상황의 변화에 둔감한 지속적이며 의식적인 ‘반미주의’와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가변적이며 정서적인 ‘반미감정’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반미운동의 현실적 효과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항구적인 의식적 ‘반미주의’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정서적 ‘반미감정’의 차별화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전자보다 후자의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한편 반미주의를 광신적이고 전투적인 ‘경성 반미주의’와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연성(lite) 반미주의’—‘비미(批美)주의’—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그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는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Naim 2003).

최근의 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강조하면서 외교안보정책 부문의 보수화 경향을 부각하는바, 한미동맹 중심적 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지지는 2002년 41.6%에서 2003년 42.5%로 약간 증가하는 반면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협력에 대한 지지는 6.6%에서 13.7%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이 주목된다(박상원 2003). 그 점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의 심리적 기초는 대체로 이중적이며 가변적이다(김호기 2003; 송호근 2003: 235-39). 일반적으로 ‘반미감정’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친미 감정과 반미감정이 상황에 따라 부침하는 이중성이 ‘반미주의’가 지배적인 경우보다 훨씬 두드러질 것이다. 최근 친북적 시각의 증가와 친미적 시각의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20대와 30대의 청년세대이다(표 3). 분단과 전쟁의 역사적 기억에 시달리는 노년세대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와 통합의 민족적 기획에 환호하는 청년세대의 시각은 지극히 유동적인 바, 친북적 시각은 1996년 21.9%에서 2003년 43.4%로 급증하는 반면, 친미적 시각은 1996년 34.4%에서 2003년 14.1%로 급감한다.

〈표 3〉 친북적 시각과 친미적 시각 (단위: %)

시기	세대	북한호감도	미국호감도
1996년		19.2	36.7
	2030세대	21.9	34.4
2003년	5060세대	15.3	39.6
		24.8	24.5
	2030세대	43.4	14.1
	5060세대	16.1	40.9

출처: 송호근 2003: 211.

그러한 심리적 성향은 ‘반미감정’과 ‘반미주의’가 착종하는 복합적 현상인바, ‘반미주의’는 ‘반미감정’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필연적 측면으로서 정서적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파편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따라서 2001년 9·11사태 이후 강화되는 부시(George Bush)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 때문에 북한핵위기와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반미감정’이 ‘반미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그와 같은 급진적 ‘반미주의’를 대변하는 ‘민주

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시각에 있어서 한국의 미군기지는 미국의 한반도 식민체제와 동북아 패권구도의 담보이자 민족통합의 장애이다.

미국의 군사적 지배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물리적 담보이자 분단체제 유지의 골간이며, 나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담보하는 물리력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는 한 미국의 지배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국 변혁운동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문제이며, 이 민족을 미국의 지배전략에서 벗어나게 하는 민족자주운동의 핵이다(전국연합 2002).

그와 같은 급진적 시각에 있어서 2002년 여중생 '살해사건'의 본질은 제국주의와 민족자주 사이 구조적 모순의 필연적 귀결이다(전국연합 2003: 4). 따라서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은 '제국주의 경제침략'에 대항하는 전면적 반미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반전평화 반미투쟁'과 '미군기지 철수투쟁'을 통하여 기층민중이 반미운동의 주력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연합 2002). 그러나 점진적 시각에 있어서 이라크전쟁은 부시정부 내 보수적 강경파의 '제국주의적 기획'으로서 한국의 이라크파병은 그에 대한 전면적 동참을 의미하며, 한미동맹에 입각한 이라크파병은 국가이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 정당한 목적 이외에 남용되는 동맹은 자신의 '올가미'이다. 한미동맹을 미국정부의 여러 분파 가운데 보수적 강경파에 의존하는 것은 바로 "동맹을 올가미로 전략시키는 매국행위"이다(김지석 2003). 요컨대 반미운동의 점진적 시각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미국의 특정 정부 또는 특정 분파에 따라 다분히 선택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한국의 반미주의도 상당히 가변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에 있어서 ‘반미주의’와 ‘반미감정’의 상대적 비중은 파악되기 어렵다. 대체로 범민련과 전국연합은 급진적 시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는 점진적 시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자가 북한 편향적이라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남북 균형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전국연합의 시각에서 “북의 일련의 핵동결 해제조치는 부시정권의 북한붕괴 시나리오에 맞선 체제수호 전략이자, 불안정한 제네바협정을 넘어 북미불가침조약과 본격적인 평화보장체제를 통해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려는 공세적 조치이다”(전국연합 2003: 10).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시각에 있어서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며, 한반도문제를 ‘민족공조’로 풀어 가자는 북한 측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다”(민주노동당 2002: 51).

IV. 정책적 함의

1. 반미운동의 평가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대외적 주체화의 요구에서 드러나는 한국과 필리핀의 격차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대미의존의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반미운동의 현실적 지향과 수준에서 드러나는 양국의 차별성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대외적으로 양극적 냉전체제의 해체와 일극적 패권체제의 부상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지만, 그 현실적 파급효과는 필리핀과 한국에 대하여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외적 정책수단이 진영적 차원의 온정주의적 공동이익을 위한 다자주의적 ‘동역’에서 세계적

차원의 패권주의적 국가이익을 위한 일방주의적 ‘강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반미운동의 확산 가능성도 증대한다(Anderson 2002). 따라서 필리핀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한국의 경우 패권주의적 압력과 ‘반미주의’적 대응의 가능성이 모두 훨씬 크다는 객관적 조건은 반미운동에 대한 보다 다원적이며 역동적인 시각을 요청한다.

현실적으로 한미동맹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시각은 대체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 ‘민족공조’에 대한 기대,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국의 다자협력에 대한 요구 등 세 시각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가운데 ‘민족공조’를 추구하는 급진적 ‘반미주의’에 있어서는 “한미공조는 전쟁공조”이므로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북미대결을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로 전환시켜야 한다”(범민련 2003; 전국연합 2003: 27). 그러나 점진적 ‘반미주의’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한미동맹의 점진적 개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추구한다.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 남북한과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중국이 주변국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여기에 일본, 러시아, EU 등이 국제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민주노동당 2002: 51, 157).

그와 같이 한국사회에 정착된 반미운동과 그 다양한 분화현상은 구조적 기반이 결여된 사회적 ‘이변’이 아니라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 국제적 탈냉전 등 일정한 역사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구조적 ‘진화’의 소산이다. 그것이 민족적 ‘자산’인가 ‘부채’인가는 접근시각의 문제이다. 그 점에 있어서 반미운동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나 전면적 거부라는 단선적이며 정태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적 시각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중층적이며 역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관리전략은 한미동맹에 의존하여 남북협력과 지역협력을

배제하는 ‘갈등단계’에서 한미동맹, 남북협력, 지역협력이 적정하게 결합되는 ‘전환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비하여 남북협력과 지역협력의 비중이 강화되는 ‘통합단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 ‘민족공조’에 대한 신중한 경계가 필요하다. 핵개발의 추진, 동결, 재개 등 북한의 모든 전략적 전환에 대한 전면적 지지는 진정한 상호적 ‘민족공조’가 아닌 일방적 ‘대북동조’에 불과하다(전국연합 2002; 전국연합 2003a).

그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공론도 최근 상당히 성숙하는 경향인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경제지원은 지지 26.5% 및 반대 67.4%로서 성별, 세대, 학력, 직업,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며, 심지어 ‘진보적’ 국민의 경우에도 반대가 55.1%로서 찬성 39%를 압도한다. 통일 이후 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자유시장경제가 68.8%, 자유시장경제든 사회주의경제든 무관하다는 경우가 20.5%로서 성별, 세대, 학력, 직업,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고, ‘진보적’ 성향의 경우에도 전자가 64.1%, 후자가 25.8%로서 ‘보수적’ 성향의 경우와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한국갤럽 2003). 따라서 무조건적 한미동맹이나 무조건적 ‘민족공조’의 양극적 대안을 지양하고, 현실적 상황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한미동맹, 지역협력, 남북협력의 다양한 결합을 통하여 한미동맹이나 ‘민족공조’ 어느 하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초래할 전략적 타율성을 최소화하는 대신 전략적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2. 한미동맹의 관리

대내적으로 ‘국가 속의 국가’로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반란집단의 위협에 직면하는 필리핀의 위기의식과 ‘국가 밖의 국가’로서 국가안보를 교란하는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국의 위기의식 사이에는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대외적으로 주변강국의 세력균형에 시달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과 ‘원격제국’의 세계패권에 의존하는 필리핀의 지정학적 위상은 심대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대미동맹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필리핀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차별성은 유사성을 압도한다. 요컨대 필리핀의 대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은 민족적 분단과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필요조건이기는 하더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의 대미동맹에 대한 일방적 의존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국가안보, 민족통합, 지역협력 등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되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과 그에 따라 심화되는 한국의 전략적 곤경을 타개함에 있어서, 반미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일면적이고 정태적인 한계를 탈피하여 국가안보와 민족통합에 대한 한미동맹의 ‘이중성’이 주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남쪽 주민을 불모로 삼고 있는 북한의 강경정책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동시에 우리는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야기했음도 잊지 않는다. 이제 한미동맹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조건이자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변화하는 세계질서, 동북아질서, 남북관계에서 한미동맹은 이중적 성격 때문에 도전 받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한미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다(박순성 2003: 3).

그와 같이 새로운 한미관계에서 종속적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자주적이며 상호적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서 한미동맹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냉전의 종식에 따른 세계체제의 재편,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역질서의 조정,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환 등은 국가안보와 민족통합에 있어서 한

미동맹 또는 ‘민족공조’에만 의존하는 일면적이고 정태적인 전략 대신 한미동맹, ‘민족공조’, 지역협력 등 다양한 차원이 적절하게 결합되는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전략이 요청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전략적 전환의 핵심적 고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적인 북한의 변화인바, 그 점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현실적으로 급진적 폐지가 아니라 점진적 조정의 대상이다. 일방적 ‘민족공조’나 일방적 ‘외세공조’는 한반도의 복합적 현실에 대한 적실성이 결여된 전략적 접근으로서 한국사회의 안정을 교란하고 남북관계의 혼란을 증폭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6자회담을 위한 적극적 역할이 실증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과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위한 ‘방어군’에서 동북아의 지역안보를 위한 ‘지역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시적 구상이 시사하는 미국의 전략적 전환이 모두 중요하다(Medeiros and Fravel 2003; Pomfret 2003; 黄晓峰 2003).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미국의 구상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구상은 이미 집행단계에 있는바,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국제적 책임을 분담하는 ‘대국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민족적 분단 및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적 세계질서 및 지역질서의 피해자로서 국가주권에 집착하는 종전의 일방주의와 양자주의를 지양하고 1990년대 종반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적 전환은 각별한 고려가 필요하다(王逸舟 外 2001). 한국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한 시금석인 것이다(홍순영 2003; 沈驥如 2003).

요컨대 한미동맹의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 그 전략적 타율성의 최소화와 전략적 자율성의 최대화라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방어군’에서 동북아의 ‘지역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의 구상이 주변국가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는 지역협력의 ‘인계선’이 아니라 지역분쟁의 ‘도화선’으로 전락하게 된다. 북핵문제는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에 따라 북한, 소련, 중국의 ‘북방삼각’이 해체되고 한국, 미국, 일본의 ‘남방삼각’이 강화되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전면적 재편과정에서 고조되는 북한체제의 위기의식에서 기인되는 것이다(向雁 2003). 그 점에 있어서 6자회담이라는 동북아의 유례없는 안보협력 실험에서 부각되는 중국의 중재역할과 그에 따른 각국 ‘외교혁명’의 상승효과는 지역안보의 새로운 협력기제를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전역이 “전장에서 시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Funabashi 2003; 時殷弘 2003a; 時殷弘 2003b; 時永明 2003; 李昊宇 2003).

V. 결론

일본의 패전에 따라 필리핀과 한반도에 진주하는 미국의 패권적 위상과 역할은 거의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한다. 그러나 반미운동이 부상하여 강화되고 약화되는 정치변동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필리핀과 한국은 일정한 유사성과 더불어 다양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필리핀의 경우 반미운동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부상하여 확산되고 약화되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반미운동의 등장과 성장이 지연된다. 그러한 차별성은 다양한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요인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 한국의 반미운동은 ‘신화적’ 미국담론의 해체와 ‘역사적’ 미국담론의 재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유사성을 드러낸다. ‘타자’에 대한 시각의 전환이 ‘자아’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필리핀과 한국에 있어서 1970년대 냉전체제의 균열에 따른 국가의 보수적 ‘주체담론’과 198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사회의 진보적

‘주체담론’ 사이에 존재하는 ‘혈연’은 반미운동의 일정한 정당성을 대변한다.

반미운동의 심리적 기초는 대체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한 정서적 차원의 유동적 ‘반미감정’과 상황의 변화와 무관한 의식적 차원의 지속적 ‘반미주의’로 구분되는데, 상대적으로 전자는 피동적이며 가변적인 반면, 후자는 주동적이며 지속적이다. 필리핀과 한국에서 1970년대에 잠복하고, 1980년대에 부상하며, 1990년대에 심화되는 반미운동은 일정한 구조적 필연성과 상황적 우연성이 상호 긴밀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대외적으로 양극적 냉전체제의 해체로 인하여 미국의 온정주의적 동맹정책이 약화되고 패권주의적 국가이익이 강화됨에 따라 반미운동이 강화될 구조적 환경이 조성된다. 대내적으로 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역동적 정치과정은 반미운동의 상황적 계기를 제공한다. 만성적 경제정체에 따라 심화되는 필리핀의 좌절의식과 가속적 경제발전에 따라 고양되는 한국의 자존의식은 반미운동의 주체적 조건을 강화한다. 경제적 산업화, 사회적 다원화,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대외적 주체화의 요구로서 한국의 반미운동은 필리핀보다 훨씬 높은 계속성이 예상된다.

북핵문제의 ‘난국(turbulence)’에서 부상한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라는 전략적 대안을 중심으로 증폭되는 한국사회의 반미담론은 민족적 분단 및 통합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거시적 맥락을 통하여 조명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외적 냉전종식과 대내적 정치발전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필리핀과의 일정한 유사성을 드러내는 반면, 한반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상과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소산이라는 점에서는 필리핀과의 다양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은 필리핀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다원적이고 중층적이며 역동적인 접근시각과 관리전략을 요구한다. 무조건적 ‘외세공조’는 현실적으

로 상호적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 '대미동조'로 귀결되고, 무조건적 '민족공조'는 현실적으로 상호적 '남북공조'가 아니라 일방적 '대북동조'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한 양극적 대안은 모두 대외적 환경과 대내적 조건의 가속적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라고 할 수 없는바, 한미동맹, 남북협력, 지역협력 등 다양한 전략적 대안이 창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반미주의, 필리핀, 한국, 민족공조, 외세공조

참고문헌

- 김지석. 2003. “동맹과 올가미.” 『한겨레』 10월 27일.
- 김진웅. 1992. 『한국인의 반미감정』 서울: 일조각.
- 김호기. 2003. “이제 미국은 없다.” 『신동아』 1월.
- 민주노동당. 2002. “민주노동당 16대 대통령선거 공약 자료집.”
- 박상원. 2003. “국민 점차 보수화되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13일.
- 박순성. 2003. “이라크파병 저지,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자.” 『참여연대』 10월 22일.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03. “노무현 정부는 사대매국적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10월 18일.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영희. 1999. 『반세기의 신화』 서울: 삼인.

-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2.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강령 및 규약.”
- _____. 2003a. “미국은 북한의 불가침조약 제안에 즉각 응해야 한다.” 1월 2
일.
- _____. 2003b. “2003 핵심간부 수련회 자료집.”
- 커밍스, 브루스. 2003. “한국 ‘반미주의’의 구조적 기반.” 『역사비평』 봄.
- 한국갤럽. 2003. “국민의식조사.” 4월 29일.
- 홍순영. 2003. “6자회담 감상적 접근 말라.” 『동아일보』 8월 25일.
- Abinales, P. N. 1992. “Searching for the Philippine Eden in the Post-Bases Era.”
Kasarinlan 7(4).
- Agoncillo, Teodoro A., and Oscar M. Alfonso. 1967. *History of the Filipino People*.
Quezon: Malaya Books.
- Anderson, Perry. 2002. “Force and Consent.” *New Left Review* 17(September-
October).
- Bresnan, John. 1986. *Crisis in the Philippin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nstantino, Renato(ed.). 1965. *Recto Reader*. Manila: Karrel, Inc.
- _____. 1974. *Identity and Consciousness*. Mimeograph.
- _____. 1975.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_____. (ed.). 1989. *The Essential Tanada*. Quezon: Karrel, Inc.
- David, Randy. 2003. “The Bush Visit.” *Philippine Daily Inquiry*. October 19.
- Ferrer, Miriam Coronel. 1992. “The Dynamics of the Opposition to the US Bases in
the Philippines.” *Kasarinlan* 7(4).
- Funabashi, Yoichi. 2003. “The Missions of Japan, China Are Converging.” *Asahi
Shimbun*. September 7.
- Gallup International. 2002. “Voice of the People Survey.” July-August.

- _____. 2003. "Post War Iraq Poll." April-May.
- Guerrero, Amado. 1979. *Philippine Society and Revolution*. 3rd Ed. Oakl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lipino Patriots.
- Lenin, V. I. 1965.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 Lichauco, Alejandro. 1973. "The Lichauco Paper." *Monthly Review* 25(3).
- Medeiros, Evan S., and M. Taylor Fravel. 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 Naim, Moises. 2003. "The Perils of Lite Anti-Americanism." *Foreign Policy*. May-June.
- Pomfret, John. 2003. "A New Direction for Chinese Diplomacy." *Washington Post*. August 16.
- Sison, Jose M. 1967. *Struggle for National Democracy*. Quezon: Progressive Publications.
- _____. 1989. *The Philippine Revolution*. New York: Crane Russak.
- _____ and Julieta de Lima. 1998. *Philippine Economy and Politics*. Philippines: Aklat ng Bayan Publishing House.
- 李昊宇. 2003. "昔日戰場變商場爭議地段挺平靜中國邊境很安全." 『環球時報』 7月2日.
- 向雁. 2003. "中國特使穿梭三國 斡旋朝核危機舉世關注." 『今日世界』 8.
- 沈驥如. 2003.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世界經濟與政治』 9.
- 時永明. 2003. "朝鮮: 審時度勢以退為進." 『北京週報』 34.
- 時殷弘. 2003a. "中日接近與'外交革命'." 『戰略與管理』 2.
- _____. 2003b. "朝鮮核危機: 新的轉機與王尚存危險." 『大公報』 8月1日.
- 王逸舟 外. 2001. "中國與多邊外交." 『世界經濟與政治』 10.
- 黃曉峰. 2003. "美駐韓軍隊往西調." 『環球時報』 10月22日.

Abstract

Anti-Americanism in the Philippines and Kore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Sa-Myung Par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olitical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ward democracy offered similar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rise and spread of anti-Americanism in the Philippines and Korea. However, the chronic economic stagnation of the former and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the latter provided different subjective conditions for the intensity and durability of anti-Americanism. As the dynamic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led to the reorientation and redefini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interest of Korea, its anti-Americanism is far more likely to endure. The social discourse in Korea polarized into the two extremes of 'extra-national (ROK-USA) collaboration' and 'intra-national (North-South) collaboration'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aceful management of national division and unification. While unconditional 'extra-national collaboration' will result in unilateral dependence on the USA instead of mutual interdependence, unconditional 'intra-national collaboration' in unilateral dependence on the North instead of reciprocal solidarity. In this transitional stage, thus, a creative combination of diverse strategic alternatives such as international coordination, regional

cooperation, and national collaboration is essential for the North Korean question.

Key words: anti-Americanism, Korea, Philippines, extra-national collaboration, intra-national collaboration.